

# 주간 통일정세

2017-46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군사
3. 경제
4. 사회문화
5.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1.20	北 김정은, 최룡해 내세워 황병서 처벌...무슨 일 있나(연합뉴스)
		北 신문 "역경의 시기...자력갱생이 진짜 무서운 수소탄"(연합뉴스)
	11.21	北 김정은 "적대세력 발악할수록 불굴의 정신력 더 강해져"(연합뉴스)
	11.22	北 "내년 정권수립 70주년 뜻 깊게 맞아야"...생산성과 독려(연합뉴스)
	11.23	北 신문 "당은 최고 정치조직...일심단결 이룩해야"(연합뉴스)
	11.24	北, 연평도 포격 7주년 기념모임..."포사격전 승리" 주장(연합뉴스)
군사	-	-
경제	-	-
사회 문화	11.19	사회과학자대회 개최..."사회과학 발전방도 토의"(연합뉴스)
외교 국방	11.18	北 "중시진핑 특사, '북중 친선관계 계속 발전' 강조"(연합뉴스)
		北 리수용-中쑹타오 회담..."지역 정세 의견 교환"(연합뉴스)
		EU, 대북 사치품 금수 강화..."시계·와인 전면금지"(연합뉴스)
	11.21	北 신문, 트럼프 국회연설에 "극형 처해야" 맹비난(연합뉴스)
		'테러지원국 카드' 왜 꺼내들었나...제재·압박 강한 의지 천명(연합뉴스)
	11.22	조선신보, 北테러지원국 재지정에 "트럼프의 발악"(연합뉴스)
北 외무성, 테러지원국 재지정 비난..."美, 후과에 책임지게 될 것"(연합뉴스)		
北 기구 "테러지원국 재지정 철회해야...美행동 따라 대응"(연합뉴스)		
		아프리카의 '친북국가' 앙골라도 北노동자 154명 돌려보내(연합뉴스)

##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11.21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현지지도	오수용, 박태성 조용원	-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7. 11. 21.

##### ■ 北 김정은 “적대세력 발악할수록 불굴의 정신력 더 강해져”(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안남도 덕천에 있는 자동차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김정은은 이 공장에서 생산한 신형 5t급 트럭 운전석에 앉아 직접 트럭을 운전하며 “자동차의 발동(엔진) 소리가 고르롭고(일정하고) 변속도 잘되며 기관상태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당에서 정해진 기간에 새형의 화물자동차들을 훌륭히 생산했다”며 공장 간부와 노동자들을 치하하고 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 이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강화하자면 자동차를 자체로 생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현대적인 화물자동차를 팡팡(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연합기업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현대화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특히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의식한 듯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할수록 조선 노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을 낳고 있다는 것을 새로 만든 5t급 화물자동차들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11. 20.

##### ■ 北 김정은, 최룡해 내세워 황병서 처벌...무슨 일 있나(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체제가 최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에 오른 것으로 추정되는 최룡해 당 부위원장을 내세워 군부 최고실세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처벌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 권부 내 움직임에 관심이 쏠림.
-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최룡해 주재 하에 당 지도부가 불순한 태도를 문제 삼아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함.

- 국정원은 “이에 따라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제1부국장 김원홍을 비롯해 총정치국 소속 장교들이 처벌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11. 24.

### ■ 北, 연평도 포격 7주년 기념모임…“포사격전 승리”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당시 전투가 승리였음을 강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연평도 포사격 전투 승리 7돌 기념 군민 연환모임이 23일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진행됐다”며 “모임에 앞서 포사격 전투에서 승리를 떨친 군인들에게 근로자들이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며 군공을 축하해주었다”고 밝힘.
- 이날 모임에서 연설한 4군단장 리성국(상장.별 3개)은 “연평도 포사격전의 승리는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주체 조선의 백전백승 역사에 자랑스러운 페이지를 아로새긴 일대 사변”이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조국의 서남 전선 최대 열점 지역을 지켜선 인민군 장병들은 일단 명령만 내린다면 연평도 타격전의 승리 전통을 이어 즉시적이고도 무자비한 타격으로 서남 해상을 원수들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릴 멸적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 있다”고 강조함.

##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11. 20.

### ■ 北 신문 “역경의 시기…자력갱생이 진짜 무서운 수소탄”(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정론에서 “자력갱생이야말로 우리 국가 발전의 거대한 추동력, 조선(북한)의 진짜 무서운 수소탄”이라며 과학기술을 통한 자립적 경제발전을 거듭 독려하며, “조선의 자강력은 그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무한대”라고 주장함.
- 신문은 “준엄한 역경의 시기이다. 감히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를 너까린 미제 승냥이들의 발악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현 체제 국면을 언급하면서 “오늘처럼 자력갱생 그 자체가 대진군의 부름으로 된 적은 없었다”고 강조함.

- 이와 함께 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근 금성트랙터공장 시찰,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진행 중인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공사 등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자력갱생’ 사례들도 거론하며, 아울러 “이 땅에 사회주의 웃음바다를 펼쳐 가는 데서 선구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과학자, 기술자들”이라며 “일꾼이라면 누구나 과학기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송풍기가 되고 이 땅의 국민이라면 너도나도 과학기술 결사전의 참전자가 되자”고 촉구함.

2017. 11. 22.

■ 北 “내년 정권수립 70주년 뜻 깊게 맞아야”…생산성과 독려(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여 주체 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높이 떨치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우리는 다음 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라며 “올해 (생산)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다음 해 전투를 위한 준비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우리는 만단의 준비 밑에 다음 해 전투의 첫 시작부터 대비약적 혁신을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해나감으로써 공화국 창건 70돌을 가장 의미깊은 혁명적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면 생산과 함께 앞을 내다보며 다음 해에 진행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작전하고 그 준비를 하나하나 예견성 있게 갖추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함.

2017. 11. 23.

■ 北 신문 “당은 최고 정치조직…일심단결 이룩해야”(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일심단결은 우리 당과 국가존립의 초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은 최고 정치조직이며 국가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라며 “일심단결은 우리 당과 국가의 생명이며 그 위력의 기본 담보”라고 역설함.
- 신문은 “당과 국가가 자기의 본태와 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사회에 대한 영도적 기능, 통일적 지도기능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가자면 일심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 또 “전 당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 대열을 수령의 참된

전사, 참된 동지의 전위대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천만 군민을 당중앙 뜨락(뜰)에 운명의 핏줄로 억척같이 이어놓는 과정이 곧 당의 강화 발전 과정”이라고도 강조함.

## 2. 군사

### 가.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 3. 경제

###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4.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 특이사항 없음

## 라. 사회 동향

2017. 11. 19.

### ■ 사회과학자대회 개최...“사회과학 발전방도 토의”(연합뉴스)

- 북한은 평양에서 제3차 사회과학자 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제3차 전국 사회과학자 대회가 17일과 18일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라며 “대회에서는 제2차 사회과학자 대회 이후 사회과학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사회과학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토의됐다”고 전함.
- 대회에는 박광호·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 전광호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재일본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과 세계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 신봉자 등 외국인들이 초대됨.

## 5.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7. 11. 21.

### ■ 北 신문, 트럼프 국회연설에 “극형 처해야” 맹비난(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1일 정세논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해 “미국의 미치광이 대통령의 특대형 범죄는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극악무도한 도전이고 우리의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우리 인민의 참된 삶에 대한 악랄한 모독”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우리의 최고존엄과 사회주의 제도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 높은 생활에 대해 마구 혈똥은 죄악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트럼프의 망동은 정치적 도발의 극치”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트럼프는 마땅히 공화국 법에 따라 최고의 극형에 처해야 한다”며 “미치광이를 국민으로 섬기며 국회에서 반(反)공화국 악담을 불어대게 한 남조



선 괴뢰들도 마찬가지로”라고 강변함.

■ **‘테러지원국 카드’ 왜 꺼내들었나…제재·압박 강한 의지 천명(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작전의 일환”이라고 직접 설명함.
-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한과 대외원조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고강도의 제재를 받고 있어 실효성은 별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임.

2017. 11. 22.

■ **조선신보, 北테러지원국 재지정에 “트럼프의 발악”(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2일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트럼프의 허세는 주체조선의 위력에 겁을 먹은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비난함.
- 조선신보는 이날 홈페이지 ‘메아리’ 코너에 게재한 글에서 “피로 얼룩진 침략과 약탈을 일삼아 온 미국이 반만년 역사를 새겨온 조선(북한)에 테러의 감투를 씌운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무지몽매의 극치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함.
- 이 신문은 “테러지원국이란 미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테러를 감행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로 멋대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있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라고 원색 비난함.

■ **北 외무성, 테러지원국 재지정 비난…“美, 후과에 책임지게 될 것”(연합뉴스)**

- 북한은 22일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엄중한 도발이며 난폭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미국은 감히 우리를 건드린 저들의 행위가 초래할 후과(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놀음은 저들에게 굴종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한 날강도적 수단들 중의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게 테러의 모자를 씌우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며 “미국은 이번에 우리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비법적인 북조선의

핵 및 탄도미사일 계획'에 들어가는 불법자금을 차단한다는 미명 하에 대조선 추가제재 발표 높음을 벌여 놓았다"고 비난함.

■ 北 기구 “테러지원국 재지정 철회해야··美행동 따라 대응”(연합뉴스)

- 북한은 23일 미국에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의 행동 여부에 따라 우리의 차후 대응조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노동당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우리를 악마화하여 고립 압살하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미국이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부질없는 대조선제재압박소동과 강도적인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9년 만에 재지정한 것과 이튿날 바로 미 재무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한 뒤 “그 자체가 아무런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으며, 이어 “트럼프가 또 한 차례의 선전포고와 같은 특대형 도발을 해온 이상 그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라며 “미국은 무섭게 치솟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증오가 미국이 바라지 않는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함.

## 나. 북·중 관계

2017. 11. 18.

■ 北 “시진핑 특사, ‘북중 친선관계 계속 발전’ 강조”(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최룡해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회 결과를 통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는 17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특사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쑹타오) 동지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라고 전함.
- 이어 “송도 동지는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회 진행 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통보하였다”라며 “그는 중조(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려는 중국 당의 입장에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덧붙였다.

■ **北 리수용 中쑹타오 회담…“지역 정세 의견 교환”(연합뉴스)**

- 북한의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1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핑(시진핑) 동지의 특사인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송도(쑹타오) 동지 사이의 회담이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힘.
-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 쌍무관계를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라고만 전하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1. 18.

■ **EU, 대북 사치품 금수 강화…“세계 와인 전면금지”(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시계와 와인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유럽연합 관보를 인용해 보도함.
- EU는 와인·맥주 등 주류와 핸드백 등 가죽제품, 외투, 장신구, 신발, 캐비어 등 22개 항목의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을 최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RFA는 전함.
- 우선 고급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 등에만 적용됐던 수출 금지가 일본 사케까지

포함한 일반 와인과 맥주, 증류주 등으로 강화됐으며, 또 핸드백을 비롯한 가죽 제품과 안장, 여행용품 등은 가격이 50유로(약 6만 5천원)를 넘을 경우 대북 수출이 금지되며, 75유로 이상의 외투와 20유로 이상의 장신구와 신발 등의 수출도 제한됨.

2017. 11. 22.

■ **아프리카의 '천북국가' 앙골라도 北노동자 154명 돌려보내(연합뉴스)**

-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앙골라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150명 이상이 강화된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라 앙골라를 떠났다고 AFP 통신이 21일 보도함.
- AFP에 따르면 마누엘 아우구스토 앙골라 외무장관은 이날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앙골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154명이 지난 19일과 20일에 앙골라를 떠났다고 밝힘.
-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의 건설회사인 '만수대'에 고용된 사람들로, 이들은 북한과 앙골라간 협력 협정에 따라 각종 기념물들을 건설해왔다고 AFP는 전함.

## II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관계	11.21	한국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핵 평화적 해결에 도움” (자유아시아방송)	
	11.22	정부 “美 추가대북제재, 북핵 해결의지 재확인한 것”(연합뉴스)	
		美무역위, 삼성·LG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권고 (연합뉴스)	
		‘美 세탁기 셰이프가드’에 베트남과 WTO 공동제소 검토(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1.20		중외교부 “강경화 장관 방중시 한중관계 개선 논의”(연합뉴스)
	11.22	한중 영사국장 회의...서해 중어선 불법조업 문제 논의(연합뉴스)	
		외교차관, 中 중앙당교 부총장 면담...“관계회복 전기 맞아”(연합뉴스)	
		한중 외교수장 회동...왕이, ‘사드 합의’ 한국 이행 촉구(연합뉴스)	
11.23	강경화 “한중, 대화 통한 북핵 평화적 해결 입장 재확인”(연합뉴스)		
			중외교부 “한중 관계개선 방안·한반도 정세 충분히 의견교환” (연합뉴스)

외교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가여부 "검토 진행중"(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1.19		日언론 "韓, 北핵·미사일 이외 정보 日과 공유 안 해"(연합뉴스)
	11.23	文대통령, 日공명당 대표 접견... "평창 계기 한일교류 증진 기대"(연합뉴스)	日공명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에 "일본 방문해달라" 아베 친서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1.21		中, 美의 北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불편'... "정세완화 도움돼야" (연합뉴스)
	11.22		中, 대북제재 명단에 중국기업 포함한 美겨냥 "일방제재에 반대"(연합뉴스)
	11.23	美, 중국산 공구함에 고율관세 부과 판정(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1.21		日, 北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반색... 아베 "대북 압력강화 환영" (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1.22	트럼프-푸틴 1시간 통화... "북한에 대한 진지한 대화 나눴다"(연합뉴스)	

	11.23		러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美 결정 긴장완화에 도움 안돼”(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일본</b>
중일 관계	11.21		中 찾은 대규모 日경제사절단 리커창 면담...“서서히 관계개선” (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러시아</b>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b>분류</b>	<b>일자</b>	<b>일본</b>	<b>러시아</b>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7. 11. 21.

##### ■ 한국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핵 평화적 해결에 도움”(자유아시아방송)

- 한국 정부는 21일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를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조치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한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함.
-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의했고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2017. 11. 22.

##### ■ 정부 “美 추가대북제재, 북핵 해결의지 재확인한 것”(연합뉴스)

- 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과 관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함.
-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힘.
-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 美무역위, 삼성·LG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권고(연합뉴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셰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미 무역위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셰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 권고안은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에는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TRQ(저율관세할당)를 제시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셰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 ■ ‘美 세탁기 셰이프가드’에 베트남과 WTO 공동제소 검토(연합뉴스)

- 정부와 국내 세탁기 업체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수입 세탁기 셰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함.
- 정부는 대미(對美) 아웃리치(접촉)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미국 정부와 정치권 주요 인사를 설득하고 셰이프가드 시행 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 산업부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 핵심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 셰이프가드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셰이프가드가 불가피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이 채택되도록 정부 입장을 지속해서 개진하겠다고 밝힘.

## 나. 한·중 관계

2017. 11. 20.

#### ■ 中외교부 “강경화 장관 방중시 한중관계 개선 논의”(연합뉴스)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 기자가 강경화 장관 21일 방중 시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달 방중 및 북핵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를 물은 데 대해 “방중 기간 한중 관계를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선할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답변함.
- 루 대변인은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이 뭐냐는 질문을 받고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양호한 중한 관계는 역사와 시대 대세에 부합하고 양국민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언급함.
- 우리 외교부는 이날 “강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22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기 위해 2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회담에서 강 장관은 왕이 부장과 12월 우리 정상의 중국 방문을 준비하고 관련 제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힘.

2017. 11. 22.

■ **한중 영사국장 회의…서해 어선 불법조업 문제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은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영사국장 회의에서 양국간 호혜적인 어업질서 구축을 위해, 중단 상태인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최근 서해 조업 질서가 개선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도 및 단속 강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해경에 의한 과도한 법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한국 측에 요청함.

■ **외교차관, 中 중앙당교 부총장 면담…“관계회복 전기 맞아”(연합뉴스)**

-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방한중인 허이팅(何毅亭)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 부총장과 22일 만나 한중 관계, 중국 국내정세, 한반도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외교부는 “양측은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발표에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전기(轉機)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 협력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함.
-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우리 정상의 연내 방중 추진 등 고위급 상호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함.

■ **한중 외교수장 회동…왕이, ‘사드 합의’ 한국 이행 촉구(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2일 저녁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지난달 31일 한중 공동 발표문에 대한 한국의 이행을 촉구함.
- 왕 부장은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 배치되는 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중국은 이를 중시한다”면서 “중국의 옛말에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줄 길 바란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지난달 31일 발표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아세안 회의에서 지도자들이 공감한 대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길 희망한다”고 발언함.

2017. 11. 23.

■ **강경화 “한중, 대화 통한 북핵 평화적 해결 입장 재확인”(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모든 외교수단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지속시키는 등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힘.
- 강 장관은 이날 베이징(北京) 포시즌 호텔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갖고, 전날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번 방문은 다음 달 대통령의 성공적인 중국 방문을 위한 사전 조율과 한중 관계,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함.
- 강 장관은 “양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최근 양국 관계 개선 추세를 강화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되도록 관계 당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함.

■ **중외교부 “한중 관계개선 방안 한반도 정세 충분히 의견교환”(연합뉴스)**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한관계 개선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와 양측 공동관심사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고 밝힘.
- 그는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고 양국 관계 발전은 양국과 양국민의 공동 바람”이라면서 “중한 수교 25주년 중 대부분의 시간은 양국 관계가 좋았으나 다들 알다시피 사드 때문에 중한 관계가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발언함.
- 그는 아울러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전날 회담에서 사드 관련 ‘3불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했다고 설명함.

■ **외교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가여부 “검토 진행중”(연합뉴스)**

- 외교부는 육·해상에 걸친 21세기판 실크로드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대일로’의 틀 안에서 우리 정부의 참가 여부가 결정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그 관련 회의에 대표단이 참석한 바가 있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함.
- 노 대변인은 이어 ‘일대일로’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냐’는 후속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함.

## 다. 한·일 관계

2017. 11. 19.

### ■ **日언론 “韓, 北핵·미사일 이외 정보 日과 공유 안 해”(연합뉴스)**

- 한일 양국이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음에도 한국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이외의 정보 공유는 거부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함.
- 신문은 복수의 군사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이는 한일 간 방위협력에 신중한 청와대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사항 이외에 중국군의 동향이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안보환경 등의 정보를 일본과 교환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도 한국 측이 미군 이상의 정보 수집력은 없다고 생각하는 데다 한일 간 정치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북한 관련 이외의 정보 교환 제안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2017. 11. 23.

### ■ **日공명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에 “일본 방문해달라” 아베 친서(연합뉴스)**

-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을 요청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함.
- 교도는 야마구치 대표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전달할 아베 총리의 친서에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함.
- 야마구치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 뒤 오는 25일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임.

■ **文대통령, 日공명당 대표 접견...“평창 계기 한일교류 증진 기대”(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일본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를 접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 등을 논의함.
-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늘고 있지만,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숫자가 적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더 많은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해 인적 교류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힘.
- 북핵 위협과 관련, 문 대통령은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지 않게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 일본이 주장하는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부정적이었던 기존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재확인했으며, 야마구치 대표는 “올해 북한의 미사일이 두 차례나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등 거듭된 도발에 일본 국민의 불안이 크다”며 “국제사회가 결속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11. 21.

■ **中, 美의 北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불편’...“정세안화 도움돼야”(연합뉴스)**

- 중국은 21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 “각국이 정세안화와 대화·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가 정확한 궤도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힘.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현재 한반도 정세가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하다”면서 이런 의견을 피력함.
- 루 대변인은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했다가 귀국한 직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이 연관되느냐고 묻자 “그건 당신이 예측한 것이고 나는 필연적인 연관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함.

2017. 11. 22.

■ **中, 대북제재 명단에 중국기업 포함한 美겨냥 “일방제재에 반대”(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인과 중국기업을 포함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단행하자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 루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관련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고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중국의 노력을 모두 보고 있다”고 언급함.
- 이어 “재차 천명하고 싶은 점은 중국은 다른 국가가 자국법을 적용해 일방적인 제재로 확대 관할하는 잘못된 행동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함.

2017. 11. 23.

■ **美, 중국산 공구함에 고율관세 부과 판정(연합뉴스)**

-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중국산 공구함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정하고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함.
- 관세율은 제조 업체와 세부 품목별로 최저 14.03%에서 최고 95.96%에 이름.
- 이번 중국산 공구함 보조금 지급 판정 건은 미주리주에 있는 워털루 산업의 제조에 따라 이뤄짐.

나. 미·일 관계

2017. 11. 21.

■ **日, 北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반색...아베 “대북 압력강화 환영”(연합뉴스)**

-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발언함.
-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의 측근인 소노우라 겐타로 총리 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 의사를 미국 정부에 전달함.
- 그는 쿠슈너 고문과의 회담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이 지금의 정책을 바꾸는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지금대로라면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환영함.



## 다. 미·러 관계

2017. 11. 22.

### ■ 트럼프-푸틴 1시간 통화..“북한에 대한 진지한 대화 나눴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함.
-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북한과 시리아, 이란,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을 놓고 1시간가량 의견을 교환함.
- 크렘린 궁은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합의에 따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시리아 내 테러리스트 격퇴를 위한 군사작전이 종료돼 가는 점을 고려해 현안인 시리아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전함.

2017. 11. 23.

### ■ 러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美 결정 긴장완화에 도움 안돼”(연합뉴스)

-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미국의 결정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위협 행동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23일(현지시간) 비판함.
-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또 다른 위협 행동에 가깝다”면서 “지금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지향하는 외교적 활동을 해야 할 때이며 미국의 행동은 명백히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 그는 이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있는 양자·다자협상 틀을 갖고 있다”면서 “상황을 극한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지역·세계적 수준의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라. 중·일 관계

2017. 11. 21.

### ■ 中 찾은 대규모 日경제사절단 리커창 면담..“서서히 관계개선”(연합뉴스)

- 250여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대중 경제사절단이 21일 베이징(北京)에서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를 면담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연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新<木+神>原定征) 게이단련(經團連) 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체결의 필요성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여러가지 형태로 추진해 나가고 싶다”고 답변함.

- 리 총리는 또 최근의 중일관계에 대해 “서서히 개선되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개선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III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1.22	'친북국가' 앙골라 북한 노동자 내보내..“대북 제재 이행”(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특이사항 없음
북한인권 남한동향	11.22	이총리 “유엔난민기구의 탈북민 보호노력에 감사”(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문포로	11.19	박경서 “이때라고 판단되면 평양가서 이산가족 문제 풀 것”(연합뉴스)
	11.21	유엔 “강제복송 여성들 상황 중대 우려”(미국의소리)
		최덕신·류미영 아들 방북승인…분단현실속 곁절된 가족사(연합뉴스)
	11.22	유엔난민기구 대표 “北출신 난민, 결코 송환되어선 안돼”(연합뉴스)
11.23	인권전문가,탈북자들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대북압박 강화될 것”(미국의소리)	
대북지원	11.22	WFP 10월 대북 식량지원 올들어 최대(미국의소리)
	11.24	WFP “한국이 약속한 대북지원, 매달 50만명 취약계층 도울 것”(미국의소리)
		영국 외무부 “대북 원조자금 제공 모두 중단…핵개발 용납 못 해”(미국의소리)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1. 22.

### ■ ‘친북국가’ 앙골라 북한 노동자 내보내...“대북 제재 이행”(미국의소리)

-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 앙골라가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출국시킴. 힐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한 이후 나온 조치인데,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됨.
- 아프리카의 친북 국가로 알려진 앙골라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내보냄.
- 앙골라 국영매체 ‘저널 디 앙골라’는 21일 북한 노동자 153명 가운데 55명이 앙골라를 떠났다고 보도하며,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함. 또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 98명도 조만간 앙골라를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토니오 외무차관은 “북한 노동자들과의 계약 해지는 북한 회사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앙골라 정부가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힘.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 특이사항 없음.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1. 22.

### ■ 이총리 “유엔난민기구의 탈북민 보호노력에 감사”(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UNHCR(유엔난민기구)의 탈북민 보호노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해외체류 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계속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함.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리포 그란디 UNHCR 최고대표를 접견하며 이같이 부탁함.
- 이에 대해 그란디 대표는 “탈북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탈북민 접근 등에서 많은 난관이 있지만 이들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함.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11. 19.

##### ■ 박경서 “이때라고 판단되면 평양가서 이산가족 문제 풀 것”(연합뉴스)

- 박경서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주위 여건이 허락되고 이때라는 판단이 들면 평양에 갈 것”이라며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도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도 풀 것”이라고 밝힘.
- 박 회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파로 한적 본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한적 회장으로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조용히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 박 회장은 또 “한반도 평화정착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 적십자가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때가 되면 평양에 가서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분을 만나 남북 적십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협의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임.
- 그는 국제적십자연맹(IFRC) 주도의 대북지원 국제공조체계인 CAS(협력합의전략, Cooperative Agreement Strategy)에 올해 4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사실을 설명하며 “언젠가 모든 여건이 잘 될 때 이 돈도 보내려고 한다”고 설명함.
- 박 회장은 재임 기간 중점 추진할 수 있는 대북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건강·보건 문제 개선에 집중하고 싶다”며 “이것이 적십자정신에도 가장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함.

2017. 11. 21.

##### ■ 유엔 “강제북송 여성들 상황 중대 우려”(미국의소리)

- 유엔이 탈북 여성들의 처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중국 내에서 인신 매매에 취약할 뿐 아니라 강제로 북송되면 가혹 행위 뿐 아니라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힘.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북한 당국에 촉구함.
- 20일 북한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한 위원회는 북한 수감시설 내 여성들의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힘.
- 이들 여성들이 당국자들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에 취약하고 이 같은 문제들을

처리할 적절하고 독립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제도가 없다는 지적임.

- 특히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혐의로 구금된 강제북송 여성들의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힘. 이들 여성들은 수감 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음에 처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박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수감 시설 내 여성들을 성폭행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촉구함.

#### ■ 최덕신·류미영 아들 방북승인…분단현실속 굴절된 가족사(연합뉴스)

- 류미영 전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의 한국에 사는 차남 최인국 씨가 사망 1주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방북할 예정이어서 이들 가족의 사연에 관심이 쏠림. 최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고 평양을 방문하는 사례임.
- 최덕신·류미영 부부는 월북자로서 북한에서도 고위직에 오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최덕신이 1989년 사망하자 류미영도 공식 활동에 나섬. 1993년에는 남편에 이어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을 맡음.
- 그러나 이들 부부는 남한에 남아있던 최인국 씨 등 일부 자녀들과는 이산가족이 돼 여생을 보내야 했음. 남한의 자녀들도 부모의 월북 때문에 많은 사회적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짐.

2017. 11. 22.

#### ■ 유엔난민기구 대표 “北출신 난민, 결코 송환되어선 안돼”(연합뉴스)

- 방한 중인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22일 “우리가 모든 국가에 항상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북한 출신의 난민 신청자, 난민이 결코 본국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힘.
- 한국을 방문중인 그란디 대표는 이날 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힌 뒤 “왜냐하면 송환 시 이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탈북 난민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함.
- 그란디 대표는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UNHCR은 어느 곳에 있는 탈북 난민 문제도 걱정하고 있다고, 특히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함.

- 이어 “탈북 난민 문제에 있어서 기구 지원을 바라는 정부가 있다면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정부에 조력해 탈북 난민을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탈북자가 한국 시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외교) 장관님과 대화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한국의 우수한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임.

2017. 11. 23.

■ **인권전문가, 탈북자들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대북압박 강화될 것”(미국의소리)**

-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환영함. 이번 조치로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함.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진 솔티 대표는 당초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함.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함.
- 솔티 대표는 북한인권 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고무됐다고 말함. 또한,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이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지적함.

## 5. 대북지원

2017. 11. 22.

■ **WFP 10월 대북 식량지원 올 들어 최대(미국의소리)**

-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 주민에게 분배한 식량 규모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함. 자연 재해 복구 사업에 동원된 주민들에게 추가로 식량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82만7천여 명에게 2천631t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의 프란시스 케네디 로마 본부 대변인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9개도 60개 시 군의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 등이 함유된 영양 강화식품을 지원했다고 밝힘.
- 특히 지난 9월과 10월에는 가뭄으로 영향을 받은 23개 시, 군 여성과 어린이

10만여 명 이상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했다고 덧붙임.

2017. 11. 24.

■ **WFP “한국이 약속한 대북지원, 매달 50만명 취약계층 도울 것”(미국의소리)**

-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계획에 거듭 기대감을 나타냄. 외부 원조가 크게 감소된 상황에서 매달 50만 명의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힘.
- WFP가 집행을 기다리는 대북 원조 자금은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21일 지원을 의결한 450만 달러임. 당시 한국은 WFP와 유니세프에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지만 해당 금액의 공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 샬리 맥도너 WFP 워싱턴 지부 선임대변인은 22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이 한국에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함.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WFP 등에 대한 공여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힘.

■ **영국 외무부 “대북 원조자금 제공 모두 중단…핵개발 용납 못 해”(미국의소리)**

- 영국 외무부가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중단했다고 밝힘.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무기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함.
-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북한에서 벌이는 모든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함. 그러면서 영국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규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설명함.
- 이어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영국은 북한 정권에 제재를 부과하는 국제적 노력의 최전선에 남아 있다고 강조함.